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답]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 성립기 때의 고전기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치행정이 원론에 입각하여 행정을 기본적으로 관리 또는 집행으로 인식하고 전략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한다.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답]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보다는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답] ④

모든 인간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 그리고 자유경쟁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공공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은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합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제를 갖는다.

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 ② 계획예산제도
- ③ 영기준예산제도
- ④ 품목별예산제도

[답] ③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합리주의(총체주의) 예산방식이다. PPBS의 하향식 예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MBO의 장점을 받아들인 결과 구성원의 참여와 분권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적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영기준예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기획과 예산 연계·단일화	①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② 합리적 의사결정 (완전한 합리모형)	② 우선순위 결정 곤란
③ 재정의 탄력성 확보 : 재정의 경직성 타파	③ 정치적·심리적 요인 불고려 : 관료들의 경험 무시
④ 예산운영의 다양성·신축성	④ 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 조직의 희생
⑤ 구성원 참여 확대 ← 상향적	⑤ 과도한 시간노력과 정보량 요구
	⑥ 경직성 경비 축소 곤란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하향적 예산이다.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답] ④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경제적 측면에 입각하여 재정의 3대 기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 자원배분의 효율화, 소득분배의 공평화(재분배) 기능을 강조하였다. ④의 관료에 대한 통제는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제처 - 국무총리
-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답] ④

특허청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이다.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기관이다.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답] ②

윌슨(J. Wilson)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집중과 분산여부에 따라 규제정치모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등 언론에 대한 규제는 윌슨(Wilson)의 대중정치(다수정치)의 사례이다.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

할 수 있다.

-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①

ㄱ, ㄷ만 옳다.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답] ①

버먼(Berman)은 정책집행을 정형적(거시적) 집행과 적응적(미시적) 집행으로 구분하고 상향적 집행에 해당하는 적응적(미시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버먼(Berman)은 집행프로그램이 중국적으로 산출하는 정책결과는 바로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 사이에서 집행활동의 통로(passages)에 의해 결정되는데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administration), 채택(adoption),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안전교부세
- ② 보통교부세
- ③ 조정교부금
- ④ 부동산교부세

[답] ③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다. 조정교부금 「지

방교부세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와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규정된 제도로 국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답] ④

④는 강임이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며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직·과원 상태가 되었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1항).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

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답] ②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ss)란 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정형화·루틴화·공식화하는 것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답] ①

P.Dunleavy(1991)는 Niskanen의 관료이익극대화설이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즉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가시적이고 책임이 수반되는 계선기능은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으므로 준정부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떠넘기고 자신들은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선호한다.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답] ③

반대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